

불과 몇십년 전만 하더라도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이 얼마되지 않았고, 재활용되거나 퇴비화 등의 방법으로 자연에 환원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처리한다는 개념조차 없었다. 또 쓰레기 중에서 돈이 될 수 있는 양은이나 폐지, 빈 병 등은 고물상을 통하여 알뜰하게 수집되어 거의가 재활용되었다. 특히 50년대와 60년대에는 소비재의 극심한 부족으로 일반 가정에서 헌 옷을 물려입거나 기워입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고, 모든 물건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다루어져서 한번 만들어진 물건은 끝까지 제 역할을 다하고서야 버려졌으며 그것마저도 재활용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산업이 발달하고 국민소득이 향상되자 의식주 뿐만 아니라 생활패턴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내구성 제품의 잦은 교체와 편리함만을 고려한 1회용 상품의 범람으로 쓰레기 발생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환경처의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1992년도 한 해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일반 폐기물의 총량은 1일 123,154톤이며 그중에서 생활폐기물이 75,096톤으로서 61.0%, 사업폐기물이 48,058톤으로서 39.0%를 차지하고 있다. 생활쓰레기의 경우 1인당 1일 1.79kg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 셈이다. 재활용측면에서 보면 산업폐기물은 공장별로 배출되는 성상이 비교적 단일하고 일정량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므로 타제조업의 원료로 쓰이기가 용이하므로 폐기물의 재활용율(발생량의 54%)이 높은 편이나 생활폐기물은 다양한 성상의 쓰레기가 개개의 가정에서 산발적으로 배출되며, 재활용을 위한 회수, 수거체계의 한계성 때문에 재활용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발생량의 8%정도)

생활쓰레기의 성상을 품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연탄재가 23.6%, 음식물·채소류가 29.0%, 종이류 17.5%, 금속초자류 6.6%, 나무류 4.1%, 플라스틱류 5.6%, 고무·피혁류가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에서 모든 소비재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포장재나 일회용품등은 매립지의 안정화를 위협할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분해가 되지 않아 극심한 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같이 쓰레기의 양적인 증가와 질적인 악화가 가속화되면서 근래에 이르러서는 쓰레기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로 나타난 것은 쓰레기 매립장의 부족이다. 김포수도권 매립지를 제외한 기존 쓰레기매립장의 대부분이 1,000평 이하의 소규모로서 위생처리를 하지 않는 단순매립지이며, 그나마 670여개 중에서 96년까지 550개소가 종료예정이다. 그러나 신규 매립지 확보문제도 그동안 폐기물의 부적정처리로 인한 주민의 불신이 심화되어 용이하지 않다. 1990년 7월 부산 반송동의 산업쓰레기 매립장 건설반대를 시발로 하여 전 국 곳곳에서 쓰레기매립장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쓰레기 매립지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정부는 근본적으로 쓰레기매립량을 줄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쓰레기관리정책을 기존의 매립위주에서 소각위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97년까지 소각시설 46개소를 설치하여 소각율을 91년말 현재 1.6%에서 14.2%로 대폭 올릴 계획이다. 서울시도 약 2조원의 예산을 들여 200년까지 11개소(처리용량 16.350톤)의 소각장을 건설하여 일반쓰레기 전량을 소각할 계획을 가지고 일차적으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목동 쓰레기소각장 증설사업(400톤/일 증설)과 상계동 소각장 건설사업(당초 1,600톤/ 일에서 800톤/일로 변경)을 92년에 착공하였다. 매립장과 소각장 건설을 둘러싼 해당 지역주민과 그것을 강행하려는 행정당국간에 서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려는 치열한 논박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정부의 쓰레기 관리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쓰레기 관리정책에서 제일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쓰레기재활용이 활성화되면 소각의 장점인 감량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그 비용 또한 소각의 1/10에 불과하기 때문에 훨씬 경제적이고, 나아가 순환형 사회경제체제 구축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러한 논쟁이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폐기물관리정책의 발전을 가져오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양자의 입장 모두가 생산, 유통, 소비단계에서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것 같아 다소 아쉽다.

현재의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단계에서 쓰레기로 배출된 뒤의 일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기업 활동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쓰레기 처리방식은 엄청나게 쏟아져나오는 쓰레기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자. 가전제품을 비롯하여 가구, 자동차 등 내구성 소비재가 실용성보다는 편리성에 치중되고 있고, 디자인만 바꾸어도 새로운 상품으로 둔갑하여 엄청난 광고전략을 통해 끊임없는 소비충동을 유발하고 있다. 불과 3-4년 전의 상품도 벌써 '헌 것이 되었다'라는 그릇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 모든 제품들의 재질과 구조가 일반소비자들이 수리하기가 불가능하다. 수리센터에서 수리하려고 해도 신속히 와주지 않고, 오래된 제품의 경우는 제품의 부품이 없어서 수리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너무 비싸게 먹힌다. 어떤 것은 아예 새 것을 사는 편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대리점들에서는 수리에 관한 상담을 받는 기회를 새 상품을 판매하는 기회라 생각하고 성능이 좋은 새 것을 사라고 권유한다. 이래서 대형 폐기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모든 제품들이 분리수거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쓰고버리는 일회용상품과 과대포장상품의 생산,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대형수퍼마켓, 편의점, 패스트푸드점에서의 식품포장과 음료용기문제도 너무도 심각한 상황이다.

자원재활용운동 이전에 생산, 유통단계에서 쓰레기를 감량화하는 운동을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유팩 수거운동"보다는 각 기업에게 "우유병 사용운동"을 전개하는 소비자운동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생산, 유통단계에서의 쓰레기량을 줄이지 않으면 소비자는 계속해서 쓰레기처리비용을 어떠한 형태로든 물게 마련이다. (최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소비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기업에게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각각 쓰레기로 될 때의 수거, 수송, 소각, 매립 등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위험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제품종합평가"를 요구하여 환경친화적인 상품생산을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관점에서의 소비자운동은 매우 미약한 듯이 보인다.

정부와 기업활동을 개선하려는 노력 이외에 소비단계에서의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의 소비패턴의 변화 역시 폐기물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다. 소비자는 환경오염의 피해자이며 동시에 원인제공자이다. 따라서 환경적인 친화적인 소비생활 양식을 추구하는 녹색소비자로서 거듭나야 한다. 환경위기에 대한 자각과 실천의지에서 출발하여 구매에서, 사용, 폐기에 이르기 까지 기존의 소비생활양식을 바꾸어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로 전환하여야 한다. 구매단계에서 일회용품보다는 재활용하기 용이한 제품, 재생제품을 구매하고, 사용단계에서는 제품을 여러번 다시 사용하고, 폐기단계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생산, 유통, 소비단계 전과정에서 쓰레기를 감량화하는 정책이 총체적으로 수반되지 않는 쓰레기관리정책은 현재의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쓰레기재활용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종량제 실시로 인해 쓰레기배출량의 절대량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다시 말

하면 재활용품 수거율이 증가하여 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 최종 처리되는 폐기물의 양이 감소할 뿐이지 쓰레기 총 발생량이 줄지는 않는다. 스위스의 경우 종량제 실시 이전에 재활용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종량제 실시로 재활용품이 늘어나자 국내외 재활용시장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었다. 그 결과 증가한 재활용품을 처리하기 위한 또다른 사회적 비용이 증대할 수 밖에 없어 그 비용이 종량제에서 충당되어야 했다. 이러한 종량제 실시로 인한 처리비용의 상승은 결국 국외로 폐기물이 이동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스위스 역시 아직 생산업체 또는 유통업체로부터 원천적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이상의 스위스 사례에서 보듯이 쓰레기 관리정책은 궁극적으로 생산단계, 유통단계에서의 감량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